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Q & A

#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입니다



- 03 들어가며 –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에 함께 합시다
- 06 공공, 병원, 금융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나요?
- 08 [더 알아보기] 1680억을 거부하는 사람들
- 11 성과-퇴출제가 무엇인가요?
- 13 민영화와 관련이 있나요?
- 15 성과-퇴출제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요?
- 17 [더 알아보기] 병원성과급제가 불러올 일
- 20 비정규직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23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면 청년일자리 확대가 안 된다는데요?
- 26 경제도 안보도 어려운데 파업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30 “이렇게 응원합시다!”

# 들어가며

##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에 함께 합시다.

지난 13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 이후, 열차 지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과만능주의, 공공기관 비용절감, 위험업무 외주화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귀를 틀어막고 거꾸로 가는 정부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은 23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8일 파



▲ 출처: 노동과세계

업을 합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대화’를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확산하고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주의를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개편은 법으로 정한 것이니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이기주의라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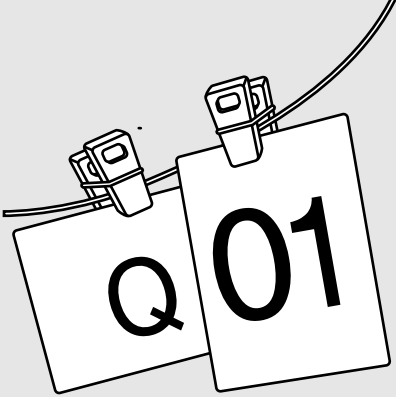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든 근거는 사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파업에 나서야 할 이유이고, 국민이 이 파업에 연대할 이유입니다.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불통으로 독주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에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기관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에 멋진 한방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소책자는 공공기관 성과 - 퇴출제와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담았습니다. 유례없는 공공기관 총파업에 전 사회적인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 갑시다.

2016년 9월 22일

사회진보연대



# 공공, 병원, 금융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나요?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은 23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8일 파업을 합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동파업은 박근혜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파견 확대 등의 노동개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공공부문에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 하였습니다.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불법으로 저지르고 폭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공공기관들에게 성과퇴출제를 조

기에 도입했다며 1,680억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사측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개약은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를 측정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고 이를 무기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게 되면, 공공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 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공공서비스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건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통으로 독주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입니다.

※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대정부 요구안

- 성과퇴출제 강요 중단
- 불법적 이사회 날치기처리 무효
- 추가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중단
-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

더 알아보기: 1680억을 거부하는 사람들 (공공운수노조 카드뉴스)

정부의 부당거래를  
폭로합니다!

# 1680억을 거부하는 사람들

168,000,000,000원

공공기관에  
1680억 원 남는 돈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할까요?



## 매수

정부는 이 돈을  
공공기관 직원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예비비 전용)
- 조기도입시 월급의 50~10% 지급(공기업 50~25%, 준정부기관 20~10%)

## 불법 성과급 잔치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한 기관  
114개에 인센티브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불법 도입한 기관입니다.

-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개정"으로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하지만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일방 강행 등으로 조기 도입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119개 기관 중 60개 사업장에서 불법 도입, 과반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56개), 노조 합의 과정 불법 강요·절차 미비(4개)

## 방만 개혁한다더니 진짜 방만은 정부

국민 부담 줄이려  
성과연봉제 도입 한다더니,  
국민 부담을 정부가 늘리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지침 "인센티브를 예비비나 인건비 잔여재원에서 지출하고 부족  
할 경우 내년도 기금예산안에 반영해 지급하라" (7월)

사진=정리대

## 검은 돈, 안 받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이 불의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반납 운동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약 4만 여명이  
조기도입 인센티브 반납에 동의하고  
현재 31억여원을 반납했습니다.

- 조기도입 인센티브 지급 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반납 동의 서명에 참여, 기관에  
서 지급되는 대로 반납 진행 중(공공운수노조 산하 지급대상 기관 26개)
- 현재 6개 노조가 31억 884,961원을 반납함

## 1680억원으로 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을

공공운수노조는  
조기도입 인센티브 예산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개선 예산확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약 1680억원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현고용 비정규직 1만7천82명  
임금 1년간 약 983만원 인상 가능

## 1680억원,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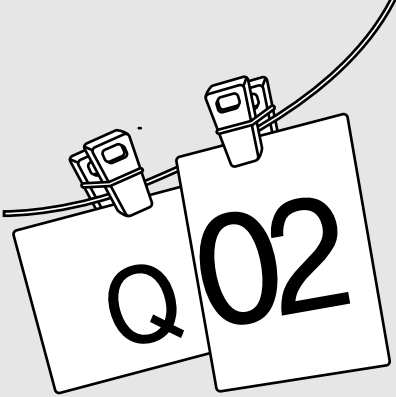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한  
포상금  
지급

VS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예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 성과-퇴출제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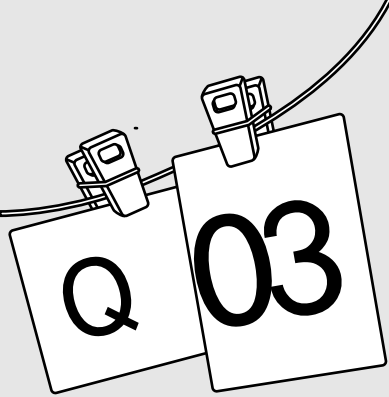
성과퇴출제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과연봉제는 퇴출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상대평가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위등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퇴출대상자가 선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약’입니다.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고(일반해고 지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취업규칙 지침) 만드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겪었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성과만능주의를 낳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하게해서 높은 병원비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은 시설·장비가 낡아도 교체하지 않고 안전인력도 줄이며 비용절감에만 혈안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는 ‘좋은 평가’받기 쉬운 실적쌓기용 행사에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예외여서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한국이 예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GM, GE, 미쓰비시, 어도비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조차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이미 포기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2009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OECD조차 "공공서비스에 성과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성과퇴출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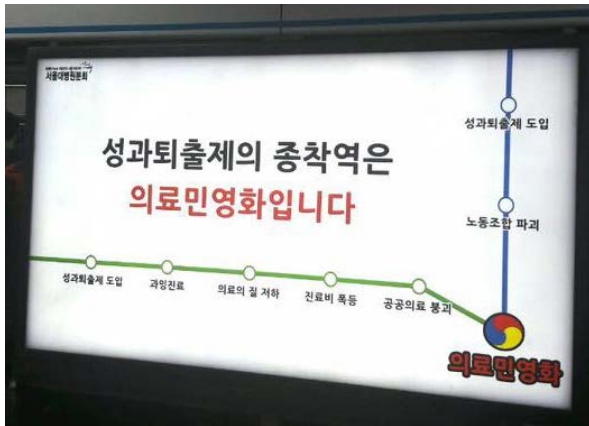
## 민영화와 관련이 있나요?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민영화와 관계가 있나요?

공공기관 성과주의는 돈벌이 경쟁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합니다.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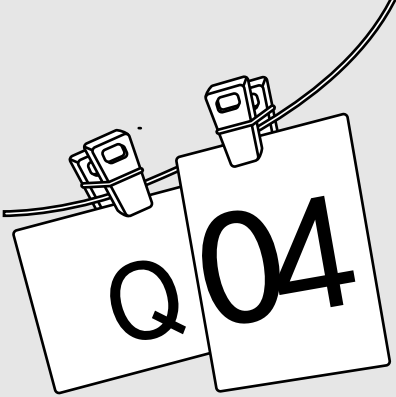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성과퇴출제와 함께 에너지(6월), 철도(7월)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및 기능조정, 민간투자 확대방안은 올해 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인데요, 성과퇴출제 도입으로 민영화 반대의 보루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후 민영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전기와 가스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발전노조, 가스노조의 파업,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싸웠던 철도노조의 파업,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게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눈엣가시이겠습니까? 폐해가 극심하여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는 극단적 임금체계 외에 다른 해법을 찾아보지는 거듭된 대화요청도 목살한 채 불법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고, 성과퇴출제 도입 반대는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다,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과 철도 민자사업 계획은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 4호선 혜화역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스크린도어 광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미명 하에 성과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손쉽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입니다. 힘을 함께 모아 민영화의 전초전,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폐기시킵시다!



## 성과-퇴출제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요?

철도, 지하철 등의 성과주의는 각종 요금할인제도 폐지, 지방선 축소, 안전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제2의 구의역 사고,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의료질 저하, 의료비 폭등, 의료공공성 후퇴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성과주의는 노후불안으로, 가스, 전기의 성과주의는 민영화와 요금폭탄으로 이어집니다.

공공기관들은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보다는 간접고용과 외주화를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려 합니다. 이것은 안전인력도 감축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구의역 사고 역시 안전업무를 축소하고 외주화를

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철도에서도 각 부서별 협력,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과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만 하지 협력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밀접하게 업무들이 맞물려 있고 잘 협력 조정되어야 안전하게 철도가 운행되는데, 어디 한군데라도 삐끗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열차 지연 정보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서, 선로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업무직영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환자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병원에서 돈벌이 경쟁을 강화하는 것 역시 피해는 국민들이 받습니다.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 30초 진료, 1분 진료가 판치고 필요 없는 검사도 부추기고 간호인력 노동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부실한 과잉진료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에서 돈벌이 경쟁은 절대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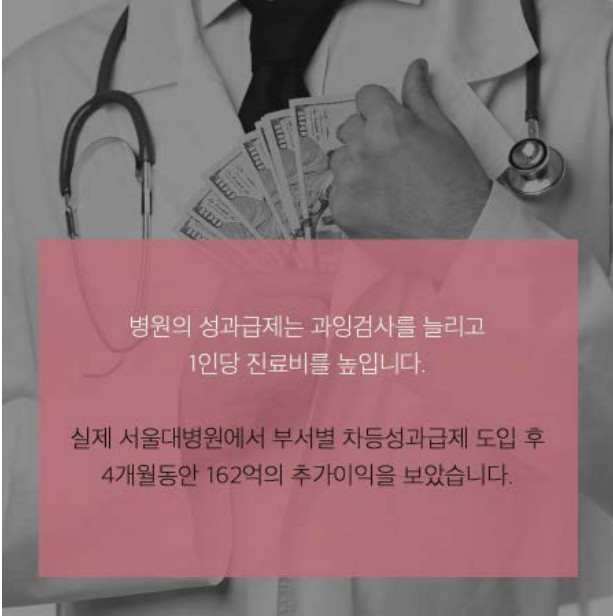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병원성과급제가 불러올 일



병원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환자들이 더 비싼 수술을 하면  
저희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양심껏 검사하고 양심껏 처치하면  
저성과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검사를 늘리고  
1인당 진료비를 높입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후  
4개월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보았습니다.

### 1. 보수/복리후생 평가지표 총평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할 것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건 및 운영방안 모색 등 정부권고안에 부합하는 성과중심형 보수체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성과중심의 평가 및 승진체도를 도입하고 부서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성과주의 조직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우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부직 성과연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노력이 인정되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인력의 성과연봉 차등폭을 4배로 확대하였으며, 직책수당 및 경력수당을 직무급으로 통합하는 등 수당을 단순화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환자들 주머니 털어서 번 돈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누가누가 돈을 많이 버나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서울대병원을 칭찬했습니다.

저희는  
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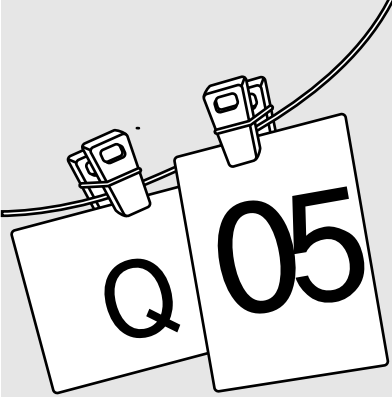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  
하기 싫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아프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고  
안전히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병원성과급제!  
병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과퇴출제 도입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불합리하게 개편되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입게 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공공기관장과 각 부서들은 경영효율성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평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것입니다. 일례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5%에 이릅니다.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에서는 2008년 이래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경영효율을 한답시고 분사, 외주화를 시킨 것이지요.

상위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하위 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거짓입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해 상위 소득자 임금을 하위 소득자에게 나눠 줄까요? 반대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의 임금 방어선이 깨지면, 전체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줄일 공리를 하겠지요. 하위 소득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격차감소가 아니라 덩달아 임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작년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대응과 4.13 총선 결과로 파견법 등 ‘노동개악’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힘들어지자, 박근혜 정부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바로 낙하산 바지사장이 수두룩한 공공기관부터 뚫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박근혜표 쉬운해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공부문이 뚫리면 민간부분으로, 전체 노동현장으로 노동개악이 확산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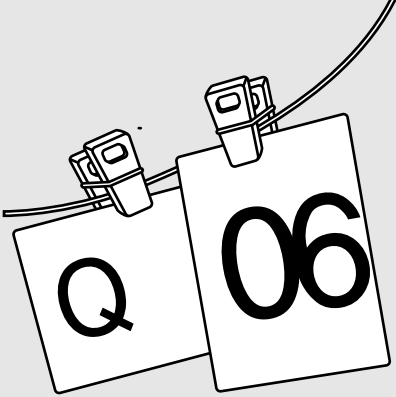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성과퇴출제 도입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불법적으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1,68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누구에게 쓰여야 할 돈입니까?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

규직화에 쓰여야 합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인센티브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 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9월 20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 동참의 뜻을 밝히고 있다.



##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면 청년일자리 확대가 안 된다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동조건과 임금 유연화는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 기간 취업자 증가율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증가시키기보단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기계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장에 걸맞게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를 보면 이 기간에 1인당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인당 생산성 증가율 20%에 비하면 사실상 정체, 삭감에 다름없습니다. 생산성에도 한참 미달하는 임금 상승률이 문제인 것입니다. 총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하위 노동자 임금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문에서 더 많은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나마 임금과 고용을 지키던 부문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이며 하위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성과퇴출제 등으로 임금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면, 이들 노동자의 소비 위축으로 오히려 경제침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노동자 간 바닥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 확대는 정규직 임금 삭감이 아니라 노동권 향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고 평균임금이 상승되어야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보다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1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강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결과는 정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높았던 대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의 규모는 작년에 비해 13.5%나 줄었습니다.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한다며 정부가 도입한 상생고용지원사업을 보면 목표가 6,000명이었는데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을 늘렸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대국민 사



기극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해마다 상승하여 올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 신규채용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64%나 됩니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걱정한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1,680억원이나 들여 성과퇴출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젊은 양반, 사정 좀 봐주게” “할머니,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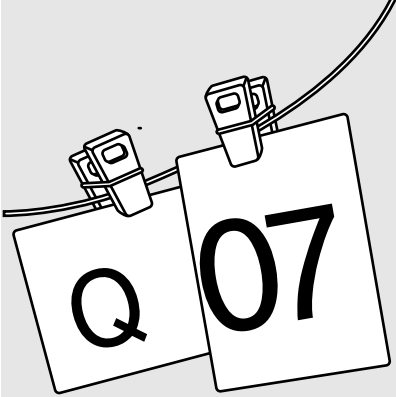
생계형 채납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징수율이 낮으면 저도 퇴출되니까요...



기억하십시오! 2004년 봄에 모퉁이 생기고 격년 30대 이상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채납금' 징수 명목으로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가자 비관 자살했습니다. 무차별 강제 징수 강요하는 성과주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9월 27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년 성취를 바꾸자는 **직권마련**을 시작합니다.





## 경제도 안보도 어려운데 파업은 자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지난 수십 년 간 정부나 경영자단체들이 해 온 얘기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폭염에 웬 파업이냐’, 태풍 올 때도 ‘태풍에 웬 파업’이냐며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붙였지요.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말대로 하면, 경제나 안보가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항상 어려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걸 공격하고, 여론을 안 좋게 하려고 맨날 정부나 경영자단체는 ‘불법 파업’이라고 매도했지요. 2013년 ‘민영화 반대’를 내 건 철도 파업 당시에 정부는 ‘정치파업’이라며 불법이라고 탄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꼬투리도 못 찾았는지 노동부장관은 불법파업 대신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

이 높은 집단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건 이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이를 명분있다고 박수라도 쳐 주었나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부와 경영자들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못하게 이런 저런 이간질 논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투쟁은 결국 ‘국민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과퇴출제라는 것이 공공 노동자들을 공격하여 그 결과로 철도, 지하철, 의료, 가스, 사회보험, 연금 등 공공서비스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막는 것은 당연히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를 확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90여 개 노동·사회·인권 단체들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공동행동’을 결성  
하여 연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당한 것에 저항하기만 하면  
늘상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권력자들에 맞서 함께 행동합  
시다.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 법국민대회

2016년 10월 1일 (토) 오후3시

서울 대학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및  
 2대 불법 행정지침 폐기!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특검실시  
 -책임자 처벌!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주최** 법국민대회 조직위원회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18시 광화문 416광장에서  
 세월호참사 900일  
 법국민문화제가 이어집니다.

# 이렇게 응원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널리 알립니다.

사회진보연대 Q&A 소책자를 주변에 권유합니다.

SNS로 총파업 응원 메시지를 올립니다.

페이스북

[<전국공공운수노조> 페이지,](#)

[<No 성과퇴출제, Yes 공공성 강화> 페이지](#) 검색

⇒ 좋아요 누르기, 응원의 댓글남기기

⇒ 내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톡, 텔레그램으로 퍼나르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함께 합니다.

- 포털사이트 관련기사에 응원의 댓글달기

파업을 지지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참가합니다.

- 10월 1일(토) 15시, 대학로

## 사회진보연대

[03984]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전화 02-778-4001,4002 팩스 02-778-4006

pssp4001@gmail.com | www.pssp.org

###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족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